

# “카드 발급하면 15만원 드립니다”

## 지나해 ‘카파라치’ 카드 불법 모집 신고 건수 218건... 과다경품제공·회원모집 위탁이 대표적

고객 유치 과열 경쟁으로 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빙 서류를 검토해 절반가량인 108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2012년 12월 도입했다. 신고 건수는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연도별로 편차가 컸지만 매년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수만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포상금 연간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얼마 못가 100만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2011년 9명에서 2012년 7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카드사들은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3곳이었다.

불법모집 유형은 과다경품제공과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연회비에 웃돈을 얹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발급하면서 현금 15만원을 제공해 1년여 동안 2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갤럭시 노트7’ 체험존에서 이치성작가(CHO)와 함께하는 클래스를 열고 ‘노트콘’을 선보였다.

하나카드 모집인도 카드 발급 조건으로 최소 1만원에서 12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타사의 카드를 유치한 실적을 교환하는 사례도 잦았다. 모집인은 영업 활동을 할 때 소속 카드만 권유하고 다녀야 하지만 고객이 해당 카드가 있다고 하면 서로 타사의 카드를 유치해 수당을 챙겼다.

불법 카드 모집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벌을 지킬 유인이 적을 뿐더러 단속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모집인에 대한 임금체계는 철저히 실적에 따라 일종의 수당을 받는 구조인데 1장 발급하는데 최소 10만원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모집인들이 고객들에게 경품으로 몇만

원을 쥐도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연회비를 지원받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어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그동안 금융당국의 제재 외에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는 모집인 대해 최대 2년간 모집인 등록을 못하게 제재해 왔는데 감사원이 여신협회의 근거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1월부터 해당 제재는 카드사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비중이 은행 등이 있는 금융지주계열도 절반 정도에 달한다”며 “모집인에 기본금을 지급하는 체계도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불법 모집을 단속하거나 모집인 자체를 줄일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되레 카드사간 경쟁심화로 지난해 카드모집과 부가서비스 등 카드비용은 2014년 10조601억원보다 9976억원 늘어난 11조57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에 따른 관관비도 3조505억원으로 2314억원(8.2%) 났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발급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카드사는 어떻게든 비용을 메우기 위해 카드본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를 올리거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뉴시스

##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건수 2.3% 감소

### 20대 남자 취업사기·40대 여성 대출빙자에 당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만1555건으로 1년 전(2만2069건)보다 2.3%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사칭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65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781건) 대비 24.9% 줄었지만,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2.6% 증가한 1만4964건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의 비중이 73.9%로 압도적이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14.7%, 새마을 금고·우체국 등이 11.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은행권은 5.3%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은 1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1만2807명으로 전 기(1만1515명) 대비 15.5% 줄었다. 반면 법인 명의인은 752개로 18.1% 증가했다.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명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사기는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특히 취약했다.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20대(16.4%), 여성은 40대(9.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포통장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 20대는 취업사기, 4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빈번했다.

김범수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융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구직사 이터에서 통장 양도시 일정 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등 대포통장 확보 수단이 대안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기아차 K5 모바일 앱 레드닷 디자인상 ‘우수상’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서

기아자동차는 ‘올 뉴 K5’ 모바일 앱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6 레드닷 디자인상’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모바일 앱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올 뉴 K5의 아이패드용 영문 모바일 앱은 디자인과 체험 위주의 구성을 바탕으로 총 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내·외장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차량의 실내공간과 각종 편의사양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실제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3D 입

체화면도 구현했다.

앞서 올 뉴 K5는 지난 3월 2016 레드닷 디자인상의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아차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레드닷, IF,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모바일 앱 부문에서 차츰 홍보 앱으로 총 8개를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상에서는 제품 디자인 15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6개 등 총 21개를 수상했다. 쏘울은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2009년 한국차 최초로 수상한 이래 8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뉴시스

## 저가요금제에 ‘지원금 더 주기’ 가능해져

### 단통법 개정...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는 점 보완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저가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높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위임 행정규칙(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된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시행돼 왔다.

기존 고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지급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지원금 비례원칙’을 두고 있다. 각 요금제에서 지원금이 동일해야 하는 것. 지원율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 지

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이 고가요금제에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같은 비율로 지원할 경우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고시가 이동통신사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 금융사 직원 위법행위, 5년 지나면 제재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 공소시효가 금융회사 임직원에도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단 위법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인 형벌조항은 그 시효를 따르고 감사,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징계가 보류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